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규제) 중국의 희토류·배터리·반도체 등 전략품목 수출통제 조치 및 현지 반응 2
- 중국의 희토류·배터리·반도체 등 6개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전면 강화에 따라 핵심소재 수급 불확실성 확대 우려

📊 경제통상 동향

- (연준) 美 연준 베이지북 발표...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 현상 보여 5
- (탄소세) 트럼프 행정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세' 추진에 부정적 6
- (전기차) 미 전기차 보조금 종료 앞두고 사상 최고치 달성...단기 수요 둔화 전망 7

🏛️ 의회법안 동향

- 국방생산법, 청정 대기법 등 발의 2건 8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

📅 워싱턴 D.C. 주요일정

10.17(금)	• 9월 신규 착공 건수(Building permits)
10.20(월)	• 9월 미국 주요 경제 지표(U.S. leading economic indicators)
10.23(목)	• 9월 초기 실업 청구(Initial jobless claims)
10.24(금)	• 9월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규제) 중국의 희토류·배터리·반도체 등 전략품목 수출통제 조치 및 현지 반응

1. 개요

□ 희토류·배터리·반도체 등 전략품목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전면 강화

-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초경질재료·배터리·흑연·반도체 관련 장비 및 기술 등 6개 이중용도(Dual-use) 분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10.9)
 - 동 조치는 공고 제55~62호 형태로 공표되었으며, 희토류 채굴·정련·가공·자석 제조 등 전 주기 공급망 단계 전반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
 - 주요 내용으로 ▲수출허가제 강화 ▲기술이전 제한 ▲군수 및 이중 용도 사용 불허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50% Rule(지분 기준 통제) 등을 포함
 - 중국 당국은 동 조치를 통해 전략자원과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 제시
-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채굴 약 70%, 분리·정련 90%, 자석 제조 93%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우위 유지
 - 희토류 및 초경질소재를 전략안보산업으로 분류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영향력 제고 추진
 - 동 조치를 미국의 對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및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하며, 중국이 전략소재를 활용해 협상력 제고를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

2. 상세 내용

□ 수출허가제 도입·기술이전 제한·역외적용 등 전방위 통제 체계 시행

- (공고 제55호) 초경질재료(Superhard Materials)
 - 합성 다이아몬드(분말·단결정), 절단용 다이아몬드 와이어(Diamond Wire Saw), 연마휠(Grinding Wheel) 등 초정밀 가공용 소재·공구를 신규 통제 대상으로 지정

- 직류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장비(DC-PCVD)* 및 관련 기술을 수출허가 품목으로 포함하여, 웨이퍼 가공·박막 공정 핵심 장비의 해외 이전 제한

* Direct Current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박막 공정에 사용

- 중국은 초경질소재 관련 기술·장비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여, 플라즈마 기반 장비 분야의 대체 공급망 형성을 제한하도록 규정

• (공고 제56호) 희토류 생산 및 정련장비

- 희토류 정련·분리 장비, 금속제련 설비, 부유제·추출제 등 정련 공정의 핵심 기자재 및 화학 시약을 신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출관리 범위 확대
- 중국은 희토류 분리·정련·재활용 공정의 기술 자립도 유지 및 핵심 기술 보호를 목표로, 관련 장비의 해외 반출 제한과 개별 허가제 적용 강화

• (공고 제57호) 중·중후(重)희토류 원소

- 홀뮴(Ho), 에르븀(Er), 유로퓸(Eu), 이테르븀(Yb), 툴륨(Tm) 등 5개 중희토류 원소 및 합금류(Fe, Cu, Bronze 등) 등을 신규 통제 대상으로 지정
- * 중국은 '25년 4월 일부 중희토류 품목(자성 소재·분말·합금 등)을 통제 대상에 포함
- 중희토류 기반 자석·반도체·방산용 핵심소재는 개별 수출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군수 및 전략산업 관련 용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

• (공고 제58호) 리튬이온 배터리 및 인공흑연

- 리튬이온 전지(셀·모듈·팩)와 인공흑연(양극재·음극재) 등 주요 소재 및 관련 생산장비를 포괄적인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 범위 확대
- 에너지저장장치 및 고용량 배터리용 소재·기술 이전에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 전지 소재의 해외 이전 및 기술 확산을 제한하도록 규정

• (공고 제61호) 희토류 및 자석 관련 역외적용

-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 함량이 0.1% 이상 또는, 중국 기술·장비를 이용해 제조된 경우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
- '50% Rule(지분 기준 통제)'을 신설하여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 등재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동일한 수출 제한을 적용받도록 규정

- 군수·이중용도 목적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수출자는 최종사용자 정보·사용 목적 및 ‘수출통제 준수확인서(Compliance Statement)’ 제출 의무 부과
- **(공고 제62호) 희토류 관련 기술이전 제한**
 - 희토류 채굴·정련·금속제련·자석 제조·재활용 등 전 공정의 설계·운영·유지보수 기술을 포괄적으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
 - 중국 국적자의 해외 희토류 프로젝트 참여 및 기술 파견은 정부 사전 승인 대상으로 지정, 기술 협력·유지보수 등도 유출 우려 시 제한 가능하도록 규정

3. 현지 반응

□ 미국 정부 강경 대응, 산업계는 핵심소재 수급 불확실성 확대 우려

- (정부) 미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핵심소재 수출통제를 “과도하고 비합리적 조치”로 규정하고, 추가 100% 대중 관세 부과 등 강경 대응 방침 시사
- (기관) CSIS 등 주요 기관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 미 국방산업은 핵심 희토류·자석 소재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동 조치로 인한 방산용 소재 조달 차질, 비용 상승 및 공급망 병목 심화 우려
 - 미국의 국방생산법(DPA) 기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련시설 가동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단기적 대체 공급망 구축의 한계 지적
- (업계) 반도체·이차전지 업계는 핵심소재 수출허가 지연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비용 상승 우려, 주요 기업은 공급선 다변화 대응 추진
 - 희토류·리튬 등 핵심소재의 수출허가 심사 지연과 공급 제한으로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일정 차질 및 비용 상승 우려 제기
 - 미 주요 제조업체는 소재 재고 확보, 대체 소재 개발, 배터리 기술 내재화 등 대응책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공급선 다변화 및 기술 독립 강화에 주력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중국 상무부(10.9), CSIS(10.9), White & Case(10.13) 및 현지 언론 종합

(연준) 美 연준 베이지북 발표...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 현상 보여

- (개요) 美 연준, 연방준비제도 12개 지역을 분석한 베이지북* 발표(10.15)
 - 연준은 최근 미국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 미 연준이 연 8회 12개 지역의 경기·물가·고용 동향을 종합해 통화정책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경기 보고서
 - 다만, 소비지출은 소폭 둔화된 반면, 관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
- (상세)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및 이민 규제에 따른 인력난 지속
 - 연준 12개 지역 중 3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세, 5개 지역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 유지, 4개 지역은 소폭 둔화세를 보이며 지역별 경기 흐름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냄.
 - 다수 지역의 연준은 관세로 인한 원자재 및 부품비 상승을 보고했으며, 일부는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했으나 일부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분석
 - 이민 규제 강화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이 숙박·농업·건설·제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노동 공급 제약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
- (반응)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대되었으나, 섣다운 장기화로 정책 불확실성 증대
 -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 일부 지역 연준은 향후 6~12개월 내 수요 회복 기대를 언급했으나, 섣다운 장기화가 경기둔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섣다운으로 인한 주요 경제통계 발표 지연으로, 경기 및 금리 인하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CNBC (10.15) 블룸버그 (10.15), 로이터 (10.15)

(탄소세) 트럼프 행정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세' 추진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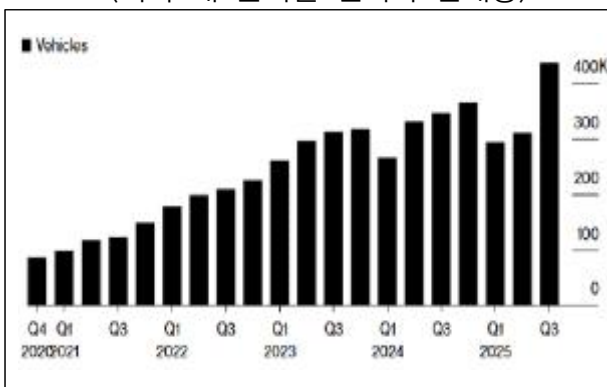
- (배경) 국제해사기구(IMO),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예정
 - 국제해사기구(IMO), 글로벌 탄소 감축 정책인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세(Carbon Tax) 시행 추진
 - *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운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초로 승인('25.4)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규제 체계
 - 국제해사기구는 임시 회의에서(10월 14일~17일, 런던) '27년 탄소세 시행*을 목표로 넷제로 프레임워크 탄소세* 최종 규칙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원국의 투표 진행 예정
 - * '25년 말 탄소세 채택 → '27년 3월 발효 → '28년부터 벌금 징수 및 인센티브 지급 예정
- (상세)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세를 강력히 반대하며 지지국에 보복 조치 경고
 - 국제해사기구 탄소세가 채택될 경우, 5,000톤 이상의 원양 선박 대상(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를 차지) 탄소 배출량 기준, 톤당 100달러에서 380달러의 벌금 부과 예정 *
 - * 연도별로 설정된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HG Fuel Intensity, GFI) 목표를 미충족 시 벌금 부과, 탄소세는 선박 회사가 IMO 넷제로 펀드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간접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징수
 -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세를 강하게 반대하며, 규칙 채택 절차를 기존의 '암묵적 수용(tacit acceptance)*'에서 '명시적 수용(explicit acceptance)**'으로 변경을 제안하며 시행 지연 시도
 - * 전체 회원국의 1/3, 또는 세계 상선의 절반이 반대하지 않을 시 자동 채택
 - ** 각국이 표결 후 별도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 규제가 발효
 - 또한, 탄소세 지지국에 대해 항만세, 비자 제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국제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최종 실행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
 - 해운 업계 전문가, 브라질과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68개국), 기후 옹호 단체는 넷제로 프레임워크(탄소세)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추진 강조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블룸버그(10.16 , 10.14), 폴리티코(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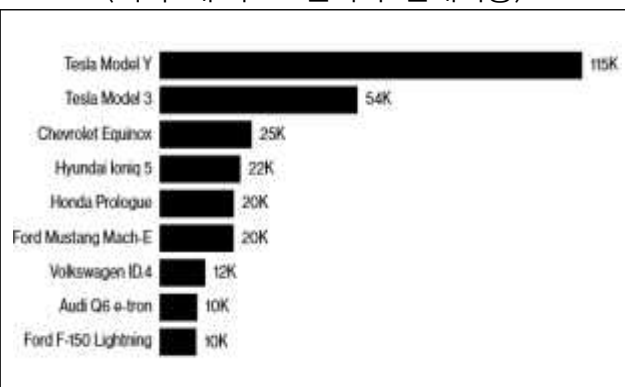
(전기차) 미 전기차 보조금 종료 앞두고 사상 최고치 달성…단기 수요 둔화 전망

- (개요) 연방정부 전기차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3분기 판매 사상 최대 기록
 -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3분기 43만 8천 대를 기록,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 전체 승용차 판매의 약 11%를 전기차가 차지(이전 최고치는 8.7% 선)
 - 현지는 9월 30일부로 종료된 연방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신차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 만료를 앞두고 전기차 신규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
- (상세) 보조금 종료 후 EV 평균 판매가 상승, 4분기부터 단기 수요 둔화가 예상
 - ‘One Big Beautiful Bill (OB BB) 법’ 시행으로 인해 청정차량 관련 연방 세액공제 프로그램(IRC §30D, §25E, §45W 포함)이 2025년 9월 30일부로 종료
 - 3분기 전기차 판매가 최고치를 달성한 가운데, 테슬라의 시장점유율은 41%로 하락, GM은 최근 쉐보레 Equinox와 Bolt 모델 판매 호조로 15%까지 점유율 확대
 - 보조금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2030년 기준 48% 전망에서 27% 전망으로 큰 폭으로 하락 조정될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은 연방 보조금 종료가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을 제약하지만, 배터리 원가 하락과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이 향후 시장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

〈미국 내 분기별 전기차 판매량〉



〈미국 내 주요 전기차 판매차종〉



[자료: Cox Automotive, 블룸버그 인용]

- | | |
|-------|--|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 ■ 자료원 | 블룸버그(10.16), IRS 청정차량 FAQ (링크)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美 국방 생산법 (10.14)	H.R.5760 (하) (10.14)	Elise Stephanik (공)	<p>〈농업 안전장치 및 안보 증진법 (Promoting Agriculture Safeguards and Security (PASS)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제정된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개정으로 美 농무장관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포함시키는 법안 외국 기업(식품 대기업, 농업기술·생명공학 기업 등)이 미국 농지, 식품가공시설, 농업 바이오 기업 등을 인수할 경우, CFIUS의 강제 심사 대상 국가안보·식량안보 차원의 외국 자본 유입 통제 강화 목표
청정 대기법 (10.14)	S.3007 (상) (10.14)	Cynthia Lummis (공)	<p>〈디젤 트럭 배출가스 제어장치 법 집행 금지 법안 (The Diesel Truck Liberation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상 디젤 트럭 배출가스 제어 장치의 설치·인증·유지 관련 법 집행을 금지하는 법안 촉매변환기, 센서, 필터링 시스템 등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생산·수출하는 해외 제조사에 영향 예상

* 미국 동부 시간 10월 16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u>Trump Says He Will Meet With Putin in Budapest to Discuss End to Ukraine War</u> (트럼프와 푸틴, 부다페스트에서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하기로 결정,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 결정 이행 여부 미정
The Washington Post	<u>Chamber of Commerce sues Trump to block \$100,000 fee for H-1B visas</u> (상공회의소,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도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제소)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 스폰서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 주장, 기업 단체 중 비자 정책 관련 첫 소송
The New York Times	<u>China's Rare Earth Restrictions Aim to Beat U.S. at Its Own Game</u> (중국, 희토류 규제로 미국 통상 규제 대응)
	중국이 세계 공급망을 무기로 희토류 및 관련 기술·장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부과, 미국의 통상 규제에 비해 더 큰 레버리지로 작용 가능
Reuters	<u>G20 vows to keep focus on developing countries' debt issues</u> (G20, 개발도상국 국가 부채 문제 집중 약속)
	2025년 IMF·세계은행 연례 회의에서 만난 G20 국가 재무장관들, 중저소득국들이 직면한 높은 자금 조달 비용과 부채 부담에 대응 노력 선언
USA Today	<u>The job market is rough, but there are some bright spots. These sectors are still hiring</u>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 여전히 채용중인 산업은?)
	2025년 8월 보건 의료, 사회복지, 여가업 등 분야 채용이 증가하였으나 미국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타 분야 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증가분을 대부분 상쇄

* 미국 동부 시간 10월 16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38	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10월
US25-37	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	2025.10월
US25-36	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	2025.09월
US25-35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	2025.09월
US25-34	'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	2025.09월
US25-33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9월
US25-32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5.08월
US25-31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30	미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25.08월
US25-29	美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8월
US25-28	美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7월
US25-26	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5	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Geniu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7월
US25-24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2025.0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코인사-22 (2025.5.13.)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